

정책연구보고서 2013-00

# 한·중·일 아시아공동체 형성을 위한 기초연구

김 흥 태



**연구자**

연구책임

김흥태 / 책임연구위원

- 목 차 -

제1장 연구의 개요 .....	3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3
1. 연구의 배경 .....	3
2. 연구의 목적 .....	3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4
1. 연구의 범위 .....	4
2. 연구의 방법 .....	5
3. 연구의 흐름 .....	6
제2장 공동체에 대한 이론 검토 .....	9
제1절 공동체의 개념과 특성 .....	9
1. 공동체의 개념 .....	9
2. 경제공동체의 특성 .....	10
제2절 동북아의 지역공동체론 .....	11
1. 지역공동체의 논의의 배경 .....	11
2. 동아시아 경제공동체 .....	13
3. 동아시아 정치공동체 .....	15
4. 동아시아 문화공동체 .....	15
제3절 동아시아공동체 구상 검토 .....	18
1. 동아시아공동체의 형성 .....	18
2. 동아시아공동체 구상 검토 .....	20

제3장 한중일 아시아공동체 형성 여건검토 .....	27
제1절 한국 대전대도시권 .....	27
1. 지역개관 .....	27
2. 발전전략 .....	34
제2절 중국 다롄권 .....	36
1. 지역개관 .....	36
2. 발전전략 .....	36
제3절 일본 다후쿠오카권 .....	38
1. 지역개관 .....	38
2. 발전전략 .....	39
제4장 한중일 아시아공동체 형성방안 .....	43
제1절 기본방향 .....	43
제2절 한중일 아시아공동체 형성방안 .....	44
1. 공동체 형성과제 .....	44
3. 공동체 형성방안 .....	45
제5장 결 론 .....	51
제1절 연구요약 .....	51
제2절 정책제언 .....	52
참고문헌 .....	53
부 록 .....	57

## 제 1 장

### 연구의 개요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제1장 연구의 개요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연구의 배경

- 세계화가 가속화되면서 동아시아 지역의 국가들은 보다 기능적으로 상호의존 하는 관계 망에 놓이게 되었으며, 이러한 기능적 상호의존은 다양한 층위의 교류를 증가시켰을 뿐만 아니라 이와 동시에 국가간 중층의 차이와 갈등을 초래하기도 하였음
- 한·중·일을 중심으로 하는 공동체를 형성하여 동북아 지역의 국가간 인적·물적·자본 교류가 매년 양적인 팽창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호간의 정치적인 이해관계와 오랜 역사적 특수성 등으로 인해, 동북아 공동체 형성 과정의 한계를 갖고 있음
- 한·중·일은 현재 여러 가지 국제적 상황 속에서 자국중심주의에 기초한 역사관을 고수하는 경향, 아시아 공동체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지속되고 있으며, 역사, 문화, 종교, 정치적 경계가 모두 상이한 지도를 그리고 있는 것이 아시아의 현재적 상황이기도 함
- 따라서 국제환경 변화를 능동적으로 수용하는 관점에서 동북아의 신뢰회복과 공동발전을 위한 정책적 실마리를 찾아 새로운 비전 제시와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한·중·일 아시아 공동체 형성을 위한 기초연구가 요구되고 있음

### 2. 연구의 목적

- 동아시아의 중추국가인 한국, 중국, 일본 상호우호적인 관계로 한·중·일 아시아공동체 형성을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기초연구로써 우선, 공동체에 대한 이론적 검토한 후, 한국의 대전대도시권, 중국의 다롄권, 일본의 후쿠오카권에 대한 중장기적 발전계획 검토를 바탕으로 한·중·일 아시아공동체 형성과제와 방향을 모색하고자 함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1. 연구의 범위

#### 1) 공간적 범위

-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기본적으로 동아시아권을 대상으로 하되, 주로 동북아시아의 중추적인 한·중·일 전역으로 하고, 아시아공동체 형성은 한국의 대전대도시권, 중국의 다롄권, 일본의 후쿠오카권을 중심으로 하고 있음



[그림 1-1] 공간적 범위

#### 2) 내용적 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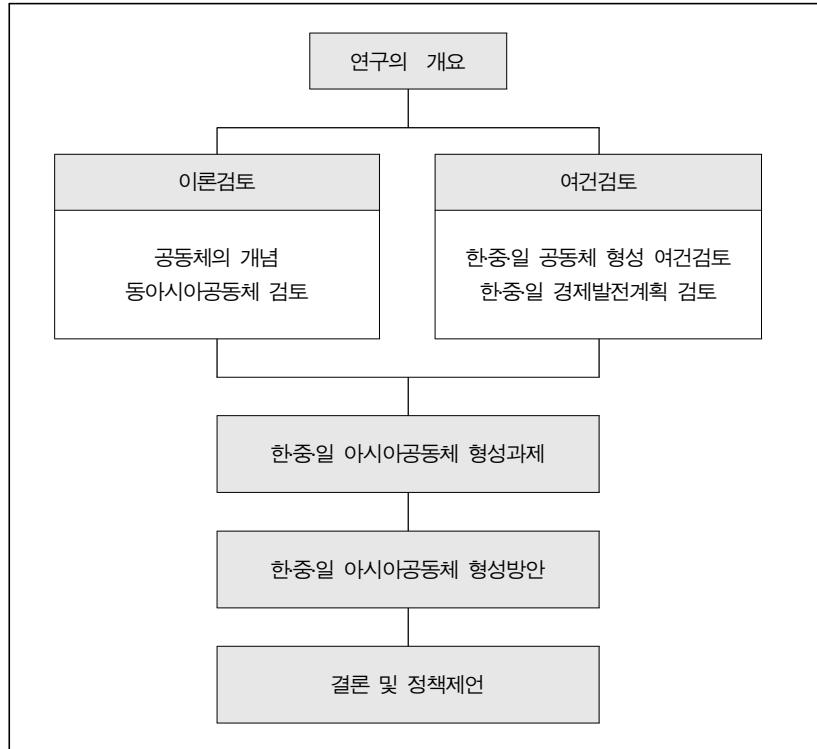
- 지역공동체에 이론적 검토는 공동체의 개념 및 동향,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 배경
- 한국의 대전대도시권, 중국의 다롄권, 일본의 후쿠오카권의 현황 및 발전방향을 파악하기 위해 발전정책을 검토
- 끝으로, 한·중·일 아시아공동체 형성과제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2. 연구의 방법

- 본 연구는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방법으로 연구를 실시함
- 첫째, 지역공동체에 이론적 검토는 문헌연구를 중심으로 통한 한·중·일 아시아공동체 형성 기본방향을 정립함
- 둘째, 한·중·일 아시아공동체 형성의 거점역할을 하게 될 한국의 충청권, 중국의 다롄권, 일본의 후쿠오카권의 현황 및 발전방향을 파악하기 위해 관련계획 및 정책을 검토 시사점 도출
- 끝으로, 한·중·일 아시아공동체 형성의 기본구상을 위한 경제발전 전략과 사회자본 등의 공동체 형성 방향을 제시

### 3. 연구의 흐름

- 한중일 아시아공동체 형성을 위한 기초연구의 흐름도는 다음의 [그림 1-2]와 같음



[그림 1-2] 연구의 흐름도

## 제 2 장

### 공동체에 대한 이론 검토

제1절 공동체 개념 및 동향

제2절 관련계획 검토

## 제2장 공동체에 대한 이론 검토

### 제1절 공동체의 개념과 동향

#### 1. 공동체의 개념

- 공동체(Community)란 같은 민족이나 종교와 언어, 역사 등을 비롯,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제도적 동질성에 기반을 두고 공동생활을 영위하는 사람들의 집단임(김영운, 2011)
- 공동체의 개념은 사회학이나 인간지리학의 영역에서 중요한 개념 요소가 되며, 공동체의 사전적 개념은 공통의 이해에 의해 연결되어 특정 지역 또는 장소에서 살아가는 사람들로 정의되며 보다 광범하게 ‘지역 자체’를 의미하기도 함
- 사회 또는 연합을 구성하는 다양한 종류의 인간들이 상호작용하는 것으로 주어진 위치에서 상호 관련된 개인들의 총체적 집합으로 정의할 수도 있으며, 이 외에도 특별한 경제적 또는 사회적 신념을 공유하며 지방자치적으로 살아가는 것으로 규정할 수 있음
- 공동체에 관한 수많은 근대적 연구들은 F. Tonnies의 Gemeinschaft와 Gesellschaft로 거슬러가며, 이는 흔히 공동체와 이익사회로 일컬어지는데 여기서 공동체는 유기체적이며 지방적인 삶을 포함하며, 사회는 기계적이며 도시적 삶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됨
- 공동체의 특징은 친근하고 가족적 연대에 관련되며 본질적이지만, 이익사회는 약하며 규칙에 토대를 두면서 인위적으로 구성된 연대라 하며, 통상적 개념으로 물리적 지역성의 맥락에서 이해되는데 주어진 지리적 영역에서 개인 및 집단간 사회적 관계의 집합적 네트워크로 일컬어지기도 하며 공통의 문화적 유대 또는 이익을 갖는 개인들의 집단으로 이해되기도 함
- 특히, 컴퓨터 네트워크에 의해 이루어지는 공동체에서는 지리적, 시간적, 이념적 요소가 중요 요소가 아니므로, 공간적, 시간적 한계를 초월하여 개인 간에 소통을 촉진하고, 조직 및 국가 간 경계에 의미를 약화시키고 있으며, 이는 전통적인 사고와 공동체 개념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음



## 2. 경제공동체의 특성

- 경제공동체(Economic Community)란 지리적으로 인접한 2국 혹은 그 이상의 국가가 동맹을 결성, 동맹국 상호간에 무역 자유화를 비롯하여 재정, 금융, 통화 등의 경제정책 면에서 상호협력을 도모함으로써 개별 경제 주체간 차별이 존재하지 않는 하나의 공동 경제단위라고 할 수 있음(대외경제정책연구원·산업연구원, 2011)
- 경제통합을 통한 지역경제공동체를 형성하는 목적은 세계경제의 통합화로 인해 개별 국가 차원에서 실시하는 경제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것으로, 특히 냉전체제의 종식 이후 지역별 자유무역화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급속히 확산됨
- 이러한 경제통합에 대한 논의는 크게 3가지로 대별되는 데, 경제통합을 사회·경제적 이상을 실현하는 과정으로 인식하는 정치·경제학적 접근, 경제통합을 경제일반에 관련된 국가적 혹은 국제적 경제거래구조의 변화 현상으로 파악하는 근대경제학적 접근, 관세동맹의 관점에서 경제통합을 이해하며 정태적 효과분석을 중시하는 관세동맹 위주의 기능주의적인 접근 등임
- 이러한 경제공동체 형성에서는 지역적 범위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경제활동은 기본적으로 지리적 요소와 강하게 연결되어 있으므로, 경제공동체는 일정한 지역적 범위 내 자본, 인력 등 생산요소와 경제정책을 기반으로 공통적 경제생활을 영위하는 주민 또는 국가들의 집합체임
- 경제공동체는 크게 제도적 경제공동체와 기능적 경제공동체로 구분되는데, ‘제도적 경제공동체’는 EU의 형성과정에서 보듯이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관세동맹(Customs Union), 공동시장(Common Market), 경제동맹(Economic Union) 등 구체적인 제도적 뒷받침과 함께 추진되는 형태를 말함
- 반면에 ‘기능적 경제공동체’란 제도적 통합은 없지만 관련 국가 간의 경제활동이 상호 긴밀히 연계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경제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며, ‘한반도 경제공동체’란 이러한 제도적 혹은 기능적 통합이 남북한 경제에 형성되어 있는 상태를 말함

## 제2절 동북아의 지역공동체론

### 1. 지역공동체 논의의 배경

#### 1) 한국의 동아시아 지역공동체 논의 맥락

- 최근 한국의 동아시아 지역공동체 구상은 동북아 3국간의 협력을 중심으로 하고 있으며, 그러나 동아시아 지역공동체 논의가 형태를 갖추기 시작한 김대중 정부 시기부터 그러하였던 것은 아님
- 1999년 김대중 대통령의 발의로 구성된 동아시아비전그룹(EAVG, East Asian Vision Group)은 2001년 제5차 ASEAN+3 정상회담에 보고서를 제출하였고, 이 보고서에서는 동아시아 자유무역지대(EAFTA, East Asia Free Trade Area) 창설, ASEAN+3의 동아시아정상회담(East Asian Summit)으로의 확대, 동아시아공동체(East Asian Community)의 건설 등과 같은 목표를 제시하였음
- 이처럼 김대중 정부 시기에는 동아시아 공동체를 강조하였으나, 노무현 정부 이후 동북아 3국이 강조되기 시작하였으며, 노무현 정부는 기존의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국이 동북아 3국의 균형자 역할을 해야 함을 강조(균형자론)하였고, 이에 따라 2003년 동북아경제중심추진위원회 설립, 2004년에는 동북아시아대위원회로 개편되었음
- 이명박 정부 들어 정부 중심의 동아시아 지역공동체 논의는 대폭 축소되었고, 2008년에는 동북아시아대위원회 역시 해체되었으나,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에 걸쳐 부상한 한국의 동아시아 지역공동체 논의는 1980년대 이후 한국의 경제성장, 민주주의와 시민사회 역량 강화를 반영하는 것이었음

#### 2) 중국의 동아시아 지역공동체 논의 맥락

- 중국에서 동아시아 지역공동체 논의가 부상한 배경에는 1990년대 이후 경제구조의 전환, 개방화, 사회구조 전환이라는 변화가 자리하고 있으며, 중국의 이른바 ‘사회주의적 시장경제’는 계획경제에서 국가의 거시경제 관리로의 이행이었는데, 그 특징은 국유기업의 비중 축소, 사영기업 확대 등이었음

- 또한, WTO 가입과 더불어 국유기업의 구조조정이 가속화되었고, 사회구조 측면에서는 단위체제의 해체, 노동시장 유연화 등이 추진되었음
- 개혁개방 과정에서 중국은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줄여나가는 것을 주요 목표로 삼게 되었고, 특히 이러한 경향은 안보 부문에서 두드러져, 군비의 증강과 현대화를 통한 동아시아 군사강국을 모색하게 되었음
- 이 과정에서 중국은 일미동맹에 맞서 성급한 방어적 팽창을 시도하기 보다는 장기적으로 일-미간의 균열을 원하는데, 이에 따라 한반도가 완충지대로서 중요한 의미를 띠게 되었음

### 3) 일본의 동아시아 지역공동체 논의 맥락

- 일본은 미국과의 관계를 중시하여 동아시아 지역공동체에 미온적이었으나, 한국과 중국이 적극적으로 나서자 뒤늦게 합류하였으며, 일본의 주요 이해는 동아시아 지역 내 중국 세력을 견제하는 것으로 요컨대 일본은 동아시아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을 유지하는 한에서 동아시아 지역공동체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고 있음
- 2002년 일본의 고이즈미 총리는 ASEAN 3에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를 포함하는 제안을 하였고, 이 배경에는 이제까지 지역협력에 소극적이던 중국이 적극적으로 변하면서 동아시아 지역공동체를 지지하고 나선 데 대한 위기의식에 따른 것임
- 이처럼 일본의 동아시아 지역공동체 구상은 한국 및 중국과는 달리 ASEAN+3 또는 호주, 뉴질랜드 등이 참여하는 보다 확대된 형태를 선호함
- 여기에는 일본의 활동 영역을 연근해에서 동남아까지 확대함으로써 경제적 이점을 취하는 동시에 중국과의 직접 충돌을 회피하고자 하는 이해가 깔려 있으며 이는 2002년 고이즈미의 동아시아 공동체 구상이 미국의 참여를 제외하였다는 점에서 한 발 나아갔으나, 대북정책과 역사문제에 대해서는 보수화 노선을 유지하고 있다는 데에서도 드러남
- 이러한 노선은 2006년 아베 내각에서도 유지되었으며 다만, 한국이 최근 들어 동아시아 지역공동체에 소극적으로 돌아선 데 반해, 일본에서는 2009년 하토야마 총리 내각이 들어서 동아시아 공동체 방안 진전에 새로운 전망이 보이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띈

## 2. 동아시아 경제공동체

### 1) 유교자본주의론

- 유교자본주의론은 동아시아의 경제성장을 유교라는 종교적 전통과 결부시켜 설명하는 논의로, 금융위기로부터의 회복에 있어 유교문화를 중심으로 한 ‘아시아적 가치(asian value)’ 를 재발견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음
- 1980년대 이후 동아시아 각국의 경제성장을 설명함에 있어 발전국가론과 그 맥락을 같이 하였던 유교자본주의론은 일본과 네 마리의 용, 즉 한국, 대만, 싱가포르, 홍콩이 공유하고 있는 유교 유산을 강조하였고, 이들 국가에서 근면성, 권위에 대한 존중, 부양자들에게 대한 온정주의적 배려, 충성심에 대한 긍정적 강조, 교육의 강조 등이 협력적 사회관계를 낳았으며, 이러한 가치들이 경제성장의 밑바탕이 되었다는 것임
- 냉전체제의 종식, 군사독재정권의 퇴진과 민주화 등 대내외적 상황의 변화로 말미암아 한국에서도 유교자본주의론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수 있는 사회적 맥락이 형성되었음. 그러나 1997년 동아시아 금융위기는 유교자본주의를 비판적으로 성찰하게 된 중요한 계기가 되었음
- 보다 구체적으로, 우선 유교자본주의 논의가 ‘기원의 망상’ 에 빠져 있다는 지적이 있으며, 동아시아 고유의 가치를 내세우지만, 그 기준이 서구식의 경제발전이라는 점에서 ‘반서구적 서구 중심주의’ 를 담지한 논의라는 것임(김기봉, 2006)

### 2) 세계화에 대한 대응으로서의 지역경제협력

- 동아시아 지역경제협력 논의는 세계화와 지역주의라는 모순적인 세계적 흐름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하였으며, 지역경제협력은 유교자본주의론의 한계를 지적하고 현실적인 경제협력 방안을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함을 강조하였음
- 세계화 과정은 시장의 확대와 일정한 지역적 범위 내에서 국가간 협력을 극대화하려는 지역주의 추세가 동시에 진행되는 특징을 갖고 있으며, 이러한 가운데 지역경제협력 논의는 동아시아보다는 동북아시아에 보다 초점을 맞추는 경향을 띠는데, 이는 구체적인 경제적 사안에 있어, 동북아 3국의 협력이 가장 중요하며 현실적이라는 인식에 기인함

- 이러한 논의들은 유교자본주의론과는 달리, 동아시아 경제성장의 문제점에 초점을 맞춘 것이며, 여기서 주로 지적되는 것이 수출 의존적 산업화의 문제임
- 동아시아 국가들은 내수부족을 수출확대로 메우는 체제를 형성해 왔는데, 경상수지 흑자가 확대되면 통화 평가절상 압력이 뒤따르고, 이에 따라 수출이 감소하면 그 위기를 구조조정과 임금억제를 통해 해결해 왔다는 것임
- 동아시아 지역 내 교역 비중 또한 각국에서 확대되어 일본의 경우 무역 흑자 중 1985년 동아시아 비중은 3.2%였으나 1993년에는 57.2%에 이르게 되며, 동아시아 지역간 경제협력의 부재로 인해 위기에 대한 대응이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되었으며, 대표적으로 달러 체제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위기에 노출된다는 문제가 있음
- 동북아 3국의 경우에도 달러 중심의 외환보유로 인해 달러가 폭락할 경우에도 그 자본 손실을 그대로 감수해야 한다는 문제가 발생함. 이미 오랜 기간에 걸쳐 지역경제협력을 발전시킨 유럽의 경우에는 1978년 유럽통화체제(European Monetary System, EMS)를 시작으로 이러한 문제에 대응해 왔음
- 이런 측면에 주목한 것이 바로 단계적 지역경제협력 논의이며, 이러한 논의들은 대부분 지역경제협력을 자유무역시대, 관세연합, 단일시장, 경제화폐연합, 정치연합의 5단계로 구분한 발라사의 정의를 따름(Balassa, 1961)
- 금융위기 이후 지역경제협력을 통해 창설된 아시아통화기금(Asian Monetary Fund, AMF) 등 부족하나마 이제 1단계에 들어섰다는 지적 등이 있으며, 나아가 아직 공식적인 논의는 미진하지만, 현실적인 필요성에 바탕하여 환율 및 통화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시도도 있음(전창환, 2005)
- 금융위기 이후 동아시아 지역 역시 FTA 체결의 국제적 흐름을 따르게 되었고 최초의 움직임은 한국이 일본에 대해 경제협력을 제안하면서 비롯되었으며, 물론 FTA는 시장 경쟁에 경제를 맡기는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경제협력 그 자체는 아니나, ASEAN과 한국이 동아시아 지역협력에서 주도적 역할을 한 이유는 상대적인 소국으로서 구조적인 압력을 받기 때문이었음(히라카와 히토시, 2006)
- FTA와 관련해서도 동북아 3국의 협력은 저조하였고, 특히 일본의 FTA 정책에서 중국과의 협정에 소극적이었던 데 반해, 동북아 3국 FTA에 대해서는 중국이 가장 적극적이었음

- 한미 FTA는 한국의 정치경제제도를 미국식 자유주의 모델로 급격히 재편하게 될 것인데, 문제는 지역경제협력의 가장 중요한 대상인 중국과 일본이 미국의 자유주의 모델과는 상이하며, 따라서 한미 FTA와 동북아 3국 간 경제협력을 동시에 추진하기 어렵다는 것임(김종길·정하용 2007)

### 3. 동아시아 정치공동체

- 동아시아의 정치적 협력에서 가장 큰 이슈는 외교 및 안보상의 협력을 통한 냉전체제의 잔재 청산이며, 1990년대 초반 한국에서 제기된 동아시아론에서도 가장 큰 관심사는 한반도 분단체제의 극복이었음
- 복합국가론은 한국이라는 국민국가 외부의 동포들을 매개로 초국가적 한민족공동체를 구성하여 복합국가로 나아가갈 것을 제안하였으며, 이를 통해 동아시아 지역공동체 추진 과정에서 패권주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고, 동아시아 문명의 대안적 성격을 살릴 수 있다는 것임(백영서, 2005; 2009)
- 이와 유사하게 일본에서는 ‘동북아 공동의 집(Common House)’ 논의가 대두되었고, 강상중, 와다 하루키( 田春樹) 등은 동북아 공동의 집 건설의 핵심이 남북 조선의 화해 및 평화공존과 통일이라고 보고, 일본이 한국에 대한 일종의 햇빛정책을 실행하여 조선반도의 영세중립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함(강상중, 2002; 와다 하루키, 2003)
- 이러한 전망이 밝지만은 않음. 대표적으로 일본은 냉전체제 종식 이후 사회당과 공산당 등 비판적 세력의 극적인 몰락을 경험했으며, 그 결과 일본에서의 동아시아 지역공동체 추진은 보수 세력이 주도하게 되었고, 이후 동아시아 질서는 다시금 미일동맹이 주도하는 경향을 띠고 있음

### 4. 동아시아 문화공동체

#### 1) 민족주의와 역사문제

- 최근 동북아 3국에서 나타나는 민족주의 배경에는 보편성을 강조하는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그 반발로 개체성을 강조하는 민족주의적 성향이 강화되고 있다는 점과 냉전체제 종식 이후 동북아 지역의 세력재편이 가속화하고 있다는 점임

- 냉전종식 후 급속한 경제성장을 하고 있는 중국의 지역패권 노선이 갈수록 뚜렷해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미국의 미일동맹의 강화는 일본의 군사전략적 위상과 역할을 증대시키고 있음
- 일본의 경우는 장기화된 경제침체가 민족주의 강화의 주된 원인이라는 지적이 있으며, 경기침체가 장기화됨에 따라 ‘정상국가(normal state)’ 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고 이는 다시 자신감 회복을 위한 일본의 정체성 찾기로 표출된다는 것임
- 일본 우익이 과거사에 대해 자학적 역사의 문제를 거론하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으나, 중국의 민족주의는 동북아 지역에서의 패권주의를 지향하고 있으며 두 가지 양태를 보임
- 하나는 한족 중심주의의 강화이고 다른 하나는 소수민족을 포함한 중화민족주의의 부각이며, 이러한 측면에서 동북공정은 소수민족의 역사를 자국사로 편입하려는 시도의 일환으로 볼 수 있음

## 2) 대중문화와 한류

- 지금까지 동아시아 지역공동체 논의들이 주로 지식인들의 담론이었다면, 한류를 필두로 한 대중문화는 정부, 시민사회운동, 지식인들의 논의와는 달리 대중들의 직접적인 교류라는 점에서 차별성을 지니며, 동시에 이러한 공통 기반이 동아시아 국가들 간의 협력을 자극하기도 함
- 1990년대 후반 이후 급증하기 시작한 동아시아 국가간 해외여행 및 유학, 그리고 ‘한류’ 로 대표되는 대중문화의 파급, 급증하는 국제이주노동과 국내기업의 해외이전, 국제결혼, 인터넷 문화의 확산 등으로 인해 사람들은 동아시아를 막연한 것이 아닌 가까운 실체로서 느끼게 되었음(임우경, 2007)
- 이러한 측면에서 동아시아공동체 정체성 창출에 있어 한류에 적극적 의미 부여하는 것은 현실적 근거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며, 한류가 한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동아시아 상호이해 촉진하고 있다는 것임(이준웅, 2004)

- 한류에는 역사적 경험으로부터 형성된 비판적 요소, 관계지향적 문화, 역동성, 소통지향성 등이 녹아 있다는 주장을 들 수 있으며, 요컨대 한류에는 반주변부적 역동성이 만들어 낸 문화적 잠재력이 있다는 것임(백원담, 2005)
- 한편, 동아시아 지역공동체의 전제는 중화사상 이후 동아시아 지역을 문화적 위계질서로 통합했던 방식으로부터의 탈피인데, 한류현상은 문화적 위계질서 재편성 측면에서 긍정적이라는 시각도 있음(김기봉, 2006)
- 한류의 유행이 한류 고유의 특징뿐만 아니라, 동북아 3국의 대중들의 욕망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라면 부침을 겪을 수 있고, 동아시아 대중문화 유행 흐름 역시 홍콩문화, 일본문화, 한국문화 순으로 변화해 왔으며, 한류가 동아시아 문화공동체 형성의 기반이 될 것이라는 주장도 신중해야 함(이옥연, 2007)
- 한국 대중문화 콘텐츠 자체의 높은 수준, 아시아 대중문화 시장의 지역화 등을 꼽을 수 있으나, 중국의 경우 개혁개방 이후 방송산업 확대에 따라 적절한 콘텐츠가 필요했고, 이것이 한류의 큰 요인이었다는 지적도 있음(장수현 외, 2004)
- 대중음악의 경우에는 유교문화 등 문화적 공통성과는 큰 관련이 없다는 지적도 있으나, 중국인들이 한국 드라마에서 나타나는 가족주의에 향수를 보이는 측면도 유교와의 관련성보다는 핵가족화 경향에 대한 반작용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임(한홍석, 2005)
- 요컨대 한류를 비롯한 대중문화가 역사문제 등과 관련한 상호이해 및 신뢰를 해결해주는 데는 약하다는 것임
- 동아시아 지역 내 문화적 상호교류가 다층적임을 보여주는 예이며 동시에 이러한 차이와 긴장이 동아시아의 문화적 통합의 기반으로 작용할 것을 보여주고 있으나, 이와 관련하여 동북아 3국 각국에 고유한 정체성이 실제로 존재하는가의 문제를 고민할 필요가 있음
- 동북아 3국의 각국 내에도 다양한 정체성들이 혼합되어 있으며, 이것을 발전시킬 때 중국 및 일본의 경우에도 상호간에 관용적인 태도를 발전시키는 것이 가능할 것임

## 제2절 동아시아공동체 구상 검토

### 1. 동아시아공동체의 형성

- 21세기 정보화와 지구화는 공간상의 일대 변혁을 중심으로 하여 탈국가주의적 지역연합화, 경제적 개방화와 세계적 단일시장의 형성, 탈근대적-다문화주의적-소수자 가치관의 확산 등과 같은 새로운 사회현상들이 생성되고 있음
- 이와 같은 세계적 차원의 사회구조적 변화와 맞물려 동아시아론이 대두되기 시작하였고, 최근에는 동북아시아, 동아시아주의, 동아시아지역통합, 동북아공동체 등에 관한 논의가 이론적 차원에서는 물론이고 정책적 차원에서도 심도있게 논의되고 있음
  - 중국의 급부상과 함께 대두하기 시작한 동아시아 혹은 동북아시아 지역에 대한 학술적-정책적 관심의 결과로 동아시아시대, 동아시아주의/동북아시아 혹은 동북아공동체 같은 개념들이 등장하고 있음
- 한국, 중국, 일본 세 나라의 국제적 위상 및 역할에 초점을 맞추면서 이들 간의 협력적-통합적 관계구축 및 새로운 지정학적-문화적 정체성을 추구하는 동아시아론은 21세기의 새로운 사회이론으로서 적지 않은 설득력을 지니고 있음
- 특히, 동아시아론은 탈국가주의와 새로운 지역주의, 반제국주의와 탈식민주의, 평화-인권-상생을 추구하는 사해동포주의(Cosmopolitanism)와 같은 탈근대적 이념과 가치지향성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음
- 한국, 중국, 일본 세 나라간의 교류와 교역은 타 지역과의 관계를 능가하고 있으며, 한국대중문화의 열풍, 소위 말하는 한류, 2002년 한일월드컵 공동개최, 중국유학 및 중국어 학습열기 등과 같은 문화적 포용의 폭과 깊이도 점차 확대되고 있음
- 중국은 전통적인 중화사상을 배경으로 문화적 민족주의 혹은 역사적 패권주의를 강력하게 표출하고 있으며, 중국사회과학원은 2003년 6월부터 중화문명탐원공정이라는 거창한 프로젝트를 주도하면서 중화문명의 시원을 새롭게 정리하여 중국문명이 세계에서 가장 오래되고 뛰어난 문명이었음을 입증하려고 시도함

- 동아시아시대의 도래에는 한편으로는 동아시아적 문화의 가치가 재평가되고, 그것의 사회경제적 힘이 확장되는 긍정적 의미가 존재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동아시아 내부에서 헤게모니를 장악하기 위한 긴장과 갈등이 초래될 수 있다는 부정적 함의를 또한 갖고 있음
- 이와 같은 모순적 국면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동아시아가 지배와 파괴 대신에 소통과 생성을 추구하는 하나의 공동체로 재구성될 필요가 있으며, 역사적으로 인접 강대국들에 의해서 군사적 침략을 당하여, 식민지가 되거나 엄청난 전쟁의 참화에 시달린 경험이 적지 않은 한국사회로서는 동아시아공동체의 추구야말로 자신의 기본적 생존권을 보장하는 가장 유효한 수단임
- 나아가, 동아시아공동체는 그간 서구에 의해서 자행된 제국주의 혹은 신식민주주의라는 야만적 근대를 불식하고, 인류가 상호연대를 맺으며 평화롭게 공존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킬 수 있는 길이 됨
- 다양성 속에서 통일이나 통합을 추구하기보다는 오히려 차이의 아름다움을 존중하고, 상호배려와 협력을 꾸준히 모색하는 일종의 느슨한 네트워크로서 기능해야 할 것이고, 각자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보장되면서도 상호간의 소통적 연결과 연대적 상호작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동아시아공동체의 당면한 과제가 될 것임

## 2. 동아시아공동체 구상 검토<sup>1)</sup>

### 1) 한국의 동아시아공동체 구상

#### (1) 구상배경

- 한국의 동아시아 경제공동체 논의는 경제협력의 증진 차원에서 시작되었으며, 주로 동아시아 경제공동체 논의의 방향과 귀결점을 ‘동북아 공동체’ 나아가서 아시아연합 등 지역통합으로 설정하였고, 그 과정에서 경제통합체인 ‘동북아 경제공동체’가 우선적으로 형성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음
- 지역 내 차원에서는 1997년 외환위기를 계기로 동아시아 각국 간의 상호협력 가능성, 동아시아 지역의 금융시장 협력체의 필요성을 실감하고 동아시아통화기금을 중심으로 동아시아 경제공동체 구상이 제기됨
- 이후 2008년 미국 금융사태로 인한 경제침체, 환율불안 등으로 인하여 한·중·일 간의 통화협력을 중심으로 동아시아 경제공동체 구상이 다시 적극적으로 논의되었으며, 계속되는 외환위기는 동아시아 국가 간의 결속력을 강화하는 계기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있음
- 한국의 동아시아 경제공동체의 구상은 주로 자유주의 접근 중에서 기능주의, 신기능주의로 대변되는 통합이론에 기반하고 있으며, 유럽통합을 모델로 삼아 단계별로 점진적 접근을 추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2) 한국의 동아시아공동체 구상

- 한국은 동아시아의 양대 강국인 중국과 일본 사이에 위치하여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이들 간 연결고리로서 중간자 역할을 모색하는 동시에, 중국과 일본에 대한 정치·군사·경제·심리적으로 위협인식을 갖고 있는 동남아 아세안 국가들과의 전략적 제휴 강화
- 한국의 동아시아공동체 추진과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체 창출 등을 통해 외교적 역할을 증대시킬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를 최대한 활용하여 아세안+3에서 진행 중인 동아시아 공동체의 논의에서 이니셔티브를 쥐고 주도적 역할을 할 필요가 있음

1) 세종연구소, 2011, 일본의 동아시아공동체 구상 : 전개, 쟁점, 그리고 한국의 대응」 자료를 발췌·요약 하였음

### 2) 중국의 동아시아공동체 구상

#### (1) 구상배경

- 중국은 중기적으로 FTA 중심의 동아시아 경제통합을 추구하면서 점차 아시아 지역을 하나로 묶는 정치·경제적 통합을 한다는 국제정치적 의도를 갖고 있으며, 중국은 작게는 동아시아를 대상으로 한 경제통합을 추구하고, 나아가 아시아 전체를 대상으로 경제통합을 포함한 지역통합을 주도하려고 함
- 중국은 지역통합에서 현실적인 접근방식을 취하여 국가와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고, WTO체제하에서의 세계화 추세에 적극 동참하면서 국내의 제도를 국제수준으로 개혁하고 세계경제에 편입을 모색하면서, 동시에 동아시아 지역통합 추세에 주도권을 행사하여 중국 경제의 역내 중심 역할을 제고
- 중국은 미국 일본등의 일극체제에 대하여 아시아 전체를 포괄하는 지역주의 운동을 주도하고 있는데, 이는 단순한 경제통합이 아니라 정치·경제적 통합을 포괄하는 성격이 강하다고 볼 수 있음
- 또한, 중국은 아세안과의 경제협력을 동아시아 경제통합을 위한 기관차로 인식하고 있으며, 중국 주도권의 아세안과의 경제통합에 일본과 한국을 끌어들이므로써 동아시아 경제통합을 완성하려는 구상을 갖고 있음

#### (2) 중국의 동아시아공동체 구상

- 중국은 탈냉전 이후 변화하는 국제정세를 어떻게 평가해야 하며, 어떠한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논쟁과정에서 중국의 국제적 위상 제고와 명실상부한 국제 강국으로서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고, 국제질서를 주도해야 한다는 것임
- 또한 중국은 대아시아 외교를 강조하면서, 주변 아시아에 대한 안정화를 도모함으로써 중국에 대한 투자와 무역 등 최적의 경제환경을 조성하는 동시에, 아시아에서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질서를 창출하여 미국의 패권주의에 대항하고자 하는 측면도 있음
- 이와 같이 중국은 경제력의 제고를 위해 안정된 주변환경과 투자 파트너 및 시장으로서의 동아시아 공동체의 필요성이 절실한 상황에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구의 패권주의

에 대응할 새로운 국제 정치경제 신질서의 수립을 지향하며 향후 다극화 과정에서 하나의 극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기반으로써 동아시아 공동체를 구상하고 있음

- 따라서 중국은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국제전략과 그 하부전략으로서 아시아에 대한 동아시아 경제공동체가 있으며, 한·중·일을 중심으로 하는 동북아 전략은 ‘작은 평화의 비틀기’ 전략의 일부로서 추진되고 있으며, 이는 동북아 경제공동체 구상의 전략적 기초가 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3) 일본의 동아시아공동체 구상

#### (1) 구상배경

- 동아시아공동체를 둘러싼 일본의 인식은 크게 동아시아 공동이익, 미국의 영향력 유지, 동아시아의 경쟁과 갈등, 그리고 중국의 부상을 고려하는 아시아 중시, 기능적다국적 협조 중시, 미일동맹 중시, 제한된 경제협력을 중시하고 있음
- 이와 같이 동아시아공동체를 둘러싼 세부적인 일본의 입장은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음
- 첫째, 하토야마 총리의 동아시아공동체 구상에서 알 수 있듯이 일본이 적극적으로 동아시아공동체를 추진해야 하며, 앞으로 동아시아공동체를 형성하는데 낙관하는 아시아주의의 입장임
  - 동아시아공동체는 일본의 경제적인 이익이 될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가 공생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미국의 아시아에 대한 비중은 줄어들고 있으며 한중일의 비중이 늘어나면서 아시아시대가 도래하고 있음을 시사함
- 둘째, 동아시아공동체는 필요하고 흐름으로 정착되고 있지만, 각국이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능적이고 다국간의 관계를 중시하는 입장이며, 이들은 동아시아공동체는 경제적인 접근이 용이하고 정치안보분야도 아젠다에 따라서는 서로 협의할 수 있는 부분이 존재한다고 하였음
  - 일본은 동아시아공동체 구상은 미일협조에 기초한 포괄적이고 기능적인 동아시아공동체이며, 중국의 부상이 아시아에 많은 변화를 가져온 것도 사실이지만, 중국과의 협력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함

- 일본은 동아시아공동체의 추진과정에서 중국과의 치열한 경쟁을 피할 수 없다는 전제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미국을 포함한 다국간의 협의체를 형성함으로써 중국을 견제할 수 있고 안정된 동아시아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다는 입장임
- 셋째, 아시아 공동체는 제한된 경제적인 측면에서만 가능하다고 보는 입장으로 동아시아에서 중국과 일본은 서로 경쟁하고 있어 일본 중심의 동아시아 경제공동체를 형성하여야 한다는 입장임
  - 경제적인 분야에서는 중국의 부상과 더불어 동아시아내에서 경제적인 이익을 공유하는 부분이 늘어가고 있다는 것은 인정한다. 그렇지만, 중국의 리스크를 강조하면서 이를 줄이기 위해서 일본이 적극적인 경제공동체를 건설해야 한다는 입장임
- 넷째, 동아시아공동체는 아직 형성될 수 없다는 입장이며, 여전히 미일동맹을 중시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일본은 동아시아에서 여전히 미국의 영향력과 시장은 중요하다고 보고 있음
  - 동아시아에서 중국이 부상하고 있음에도 아직도 미국과의 관계에서 이익이 많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일본은 동아시아 국가간의 공동된 가치의 부재와 만연한 일본에 대한 불신역시 동아시아공동체를 가로막는 주된 요인으로 봄

#### (2) 일본의 동아시아공동체 구상

- 일본 하토야마는 2009년 11월 싱가포르에서 동아시아공동체 구상을 “열린 지역협력”의 원칙에 입각하면서, 관계국이 여러 분야에서 협력을 해 나아감으로서 동아시아 지역의 기능적인 공동체 망을 중첩적으로 만들자는 것을 제안하였음
- 첫째, 번영을 위한 협력이다. 유럽의 예를 보거나 ASEAN의 예를 보더라도 경제관계의 진전은 원칙적으로 협력을 가져온다고 상정을 하고 있으며, 하토야마는 경제적인 번영을 위해 동아시아 지역에서 경제적인 틀을 만들며, 이러한 유력한 수단이 EPA/FTA라고 주장함
- 둘째, 녹색 아시아를 지키기 위한 협력으로, 지구상의 기후변동의 위협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 국가는 없다고 하였으며, 이에 일본은 2020년까지 온실효과가스를 1990년에 비해 25%삭감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것이라고 주장

- 셋째, 생명을 지키기 위한 협력으로 아시아에서 자연재해에 의해 사망한 숫자는 2007년 까지 30년간 130만 명을 넘는다고 하였고, SARS, 조류인플루엔자, 신형인플루엔자 등의 전염병도 국경을 넘어, 동아시아 지역에서 자연재해와 전염병은 전쟁을 상회하는 인간안전보장의 과제임에는 틀림없다고 주장
- 넷째, “우애의 바다” 를 만들기 위한 협력으로 이 지역은 여러 바다가 이어져 교역의 상당부분도 바다를 통해 이루어지며, 이 바다를 “우애의 바다” 로 만드는 것은 지역전체의 평화와 번영을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
- 다섯째, 인적인 교류를 주장으로 동아시아공동체 구상을 전진시킬 때에 가장 소중한 열쇠는 사람의 교류로, 하토야마는 일본 제품을 아시아국가들이 사용하고 일본에서 아시아국가로부터 수입을 증가해도 인적교류 만큼 상호 이해의 효과가 나타날 수 없다 하였음

## 제 3 장

### 한·중·일 아시아공동체 형성 여건검토

제1절 한국 대전대도시권

제2절 중국 다롄권

제3절 일본 후쿠오카권



### 제3장 한·중·일 아시아공동체 형성 여건검토

#### 제1절 한국 대전도시권

##### 1. 지역개관

##### 1) 공간적 위상

- 대전도시권은 남한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수도권인 수원 106 , 인천136km, 서울 140km, 호남권인 전주 62km, 광주 140km, 무안 171km, 목포 192km, 영남권인 대구 121km, 창원 171km, 울산 195km, 부산 201km, 그리고 제주도 325km임



그림 Ⅲ-1] 대전도시권 공간적 위상도

- 대전도시권의 표고는 100m 미만이 전체의 37.2%, 100~150m 13.9%로 비교적 평탄한 지역의 비중이 높으며, 300m 이상도 15.6%로 나타나고 있음
- 대전도시권의 지형은 대전광역시, 청주시, 연기군이 비교적 평탄하며, 동쪽으로 청원군, 보은군, 옥천군의 경계를 이루면 높은 지형을 이루고 있음
- 대전도시권의 경사분석 결과, 경사 0-5%는 35.7%, 경사 5-10%는 12.0%로 전체의 47.7%가 10% 이내의 평탄지임
- 경사 20~25%는 10.5%, 경사 25% 이상은 14.0%로 개발이 비교적 어려운 경사 20% 이상의 지역은 총 24.5%임. 이 지역은 북동측, 남동측, 그리고 서북측으로 권역의 외곽으로 나타남
- 대전도시권내 주거지역은 152.7 , 상업지역은 21.4km<sup>2</sup>, 공업지역은 37.4km<sup>2</sup>0.9%, 녹지지역은 998.8km<sup>2</sup>, 관리지역 1,433.2km<sup>2</sup>, 그리고 개발제한구역 425.6km<sup>2</sup>로 비교적 시가화용지가 부족한 상태임

## 2) 인문환경 특성

- 대전도시권은 대전광역시를 중심으로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군, 옥천군, 보은군과 충청남도, 공주시, 논산시, 계룡시, 금산군, 연기군 전역으로 총 5,197.49km<sup>2</sup>임. 이는 충청권 광역경제권의 31.31%, 전국토의 5.20%에 해당됨
- 이중, 대전광역시의 10.39%, 공주시 118.09%, 청원군 15.67%, 논산시 12.54%, 보은군 11.24%, 금산군 10.67%, 옥천군 10.33%, 연기군 6.95%, 청주시 2.95, 그리고 계룡시 1.17% 순으로 나타남
- 대전도시권의 인구는 2000년 2,644,964명에서 2010년 2,835,511명으로 연평균 0.72%의 증가추세를 보임
- 지속적인 인구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지역은 대전광역시 0.82%, 청주시 1.22%, 계룡시 4.59%, 청원군 2.12%, 연기군 0.17%, 반면에 감소하고 있는 지역은 보은군 -2.11%, 옥천군 -1.17%, 공주시 -0.82%, 논산시 -1.10, 금산군 -1.31% 수준을 보임

<표 III- 2> 대전도시권 인구 변화 추이(2000~2010년)

(단위 : 명, %)

구 분	2000년	2002년	2004년	2006년	2008년	2010년	연평균 증감률
대전도시권	2,644,964	2,688,683	2,723,729	2,757,532	2,757,532	2,835,511	0.72
대전광역시	1,385,606	1,419,573	1,443,471	1,466,158	1,466,158	1,503,664	0.82
청주시	580,861	603,941	624,288	626,679	626,679	655,971	1.22
청원군	123,984	122,782	119,745	136,538	136,538	152,944	2.12
보은군	43,245	40,420	38062	36,293	36,293	34,956	-2.11
옥천군	60,798	58,461	56,634	54,923	54,923	54,025	-1.17
공주시	135,589	132,584	130,280	128,330	128,330	124,930	-0.82
논산시	142,390	137,419	135,572	131,466	131,466	127,507	-1.10
계룡시	27,505	29,830	31,174	36,846	36,846	43,088	4.59
금산군	64,515	61,350	60,048	57,552	57,552	56,555	-1.31
연기군	80,471	82,323	84,455	82,747	82,747	81,871	0.17

- 대전도시권의 세대수는 2000년 853,672세대에서 2010년 1,081,260세대로 연평균 2.67%의 증가추세로 인구 증가추세보다 높은 현상을 보임
- 지역별로 연평균 증가율 보면, 대전광역시 2.38%, 청주시 2.84%, 청원군 4.13%, 보은군 0.29%, 옥천군 0.95, 공주시 1.36, 논산시 1.17%, 계룡시 5.19, 금산군 0.83, 연기군 2.27% 수준을 보임
- 대전도시권의 사업체수는 2000년 164,184개에서 2010년 182,322개로 연평균 1.10%의 증가추세를 보임
- 지속적인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지역은 대전광역시 0.97%, 청주시 1.44%, 청원군 5.52%, 옥천군 0.27%, 계룡시 6.96%, 금산군 0.37% 0.17%, 반면에 감소하고 있는 지역은 보은군 -2.21%, 공주시 -0.34%, 논산시 -0.08%, 연기군 -0.52% 수준을 보임
- 대전도시권의 종사자수는 2000년 701,510명에서 2010년 922,576명으로 연평균 3.15%의 증가추세로 인구의 증가율 보다 높은 수준을 보임
- 지역별로 연평균 증가율 보면, 대전광역시 3.03%, 청주시 2.07%, 청원군 8.33%, 옥천군 1.11%, 공주시 1.40%, 논산시 1.43%, 계룡시 6.88%, 금산군 1.28%, 연기군 0.39%, 반면에 감소하고 있는 지역은 보은군 -0.19%로 나타남

<표 III-4> 대전도시권 사업체수 변화 추이(2000~2010년)

(단위 : 개, %)

구 분	2000년	2002년	2004년	2006년	2008년	2010년	연평균 증감률
대전도시권	164,184	175,200	170,581	171,894	177,084	182,322	1.10
대전광역시	86,832	91,850	90,402	89,851	92,548	95,650	0.97
청주시	37,225	38,903	39,601	40,617	41,841	42,959	1.44
청원군	5,160	5,654	6,096	7,047	8,028	8,830	5.52
보은군	3,069	2,794	2,648	2,537	2,514	2,455	-2.21
옥천군	3,594	3,552	3,513	3,531	3,515	3,693	0.27
공주시	8,286	8,127	8,158	8,099	8,111	8,012	-0.34
논산시	9,317	9,275	9,204	9,091	9,300	9,243	-0.08
계룡시	908	4,404	1,246	1,485	1,592	1,780	6.96
금산군	4,584	5,250	4,459	4,555	4,682	4,757	0.37
연기군	5,209	5,391	5,254	5,081	4,953	4,943	-0.52

- 대전도시권의 산업단지 및 투자자유구역은 총 67개소, 121,527천 이며, 국가산업단지 및 투자자유구역은 5개소 79,447천㎡, 일반산업단지 26개소 36,498천㎡, 농공단지 36개소 5,582천㎡로 나타남

<표 III-9> 대전도시권 산업단지 현황(2011)

(단위 : 개소, 천㎡)

구 분	국가산업단지 및 투자자유구역	일반산업단지	농공단지	계
대전도시권	5	26	36	67
대전광역시	1	2	-	3
청주시	3	2	-	5
청원군	-	5	3	8
보은군	1	2	3	6
옥천군	-	1	6	7
공주시	-	4	10	14
논산시	-	3	7	10
계룡시	-	1	-	1
금산군	-	1	4	5
연기군	-	5	3	8
면 적	79,447	36,498	5,582	121,527

## 2) 여건종합(SWOT) 분석

### (1) 강점요인

- 국가중추기능(세종특별자치시)과 과학기술(첨단 R&D분야 기반시설과 인적자원)의 전국적 영향력과 지배력 보유
- 국가중추관리의 중심 : 국무총리실을 포함하여 중추행정관련 17개 정부부처와 20 정 부기관이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예정)
- 국가 지식경제와 기술혁신의 중심 : 세계적인 R&BD 인프라를 바탕으로 창업보육 및 사업화를 위한 최적의 산업클러스터 구축여건이 매우 좋음
- 동북아 및 국토의 교통·교류 중심지 역할과 지역 간 상생발전의 잠재력 보유
- 유통·물류중심으로써 최적의 입지요건을 갖추고 있으며 광역교통의 허브로서 고속철도 및, 고속도로의 분기점이기도 하며 동북아 물류의 배후로서 내륙 종합유통산업의 허브로 성장할 가능성이 충분
- 백제/기호유교 문화권의 중심지
-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문화예술, 종교, 학문, 역사 등 다양한 분야의 문화자원을 보유한 권역이 공존 : 백제·기호유교 문화권

### (2) 약점요인

- 중부권 핵심 도시권역의 발달 미흡과 낮은 GRDP, 인구증가 정체현상 등
- 인구증가율의 둔화, 고령사회 도래, 국내투자 및 생산기반 위축 등의 대내적 여건을 고려했을 때, 대외적인 글로벌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도시권역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편임
- R&D와 상업화 연계를 위한 산업지원 인프라 부족
- 대전의 R&D, 충남·충북의 산업생산기능 등의 기능적 분업은 예상되나 이를 상호 연계 발전시켜 사업화 및 상업화에 따른 지원시설 등이 부족한 편임
- 국제공항 기능과 인프라 부족 및 저조한 이용률

- 청주의 국제공항을 보유하고 있기는 하나 타 지역(주로 광역경제권)에 비해서는 그 수가 적고 활용도 역시 아직까지는 크게 활성화되지 않아 대외적인 국제물류시설 확충 등이 요구됨

- 도시권 내 지역발전 격차 상존

- 도시권내 중심도시권과 인근지역간 경제적 격차로 상호 연계·융합 및 시너지 도모 한계 : 권역 내 지역 간 경제력 격차가 심화되고 있으며 농어촌지역의 자립적 발전기반이 취약

**(3) 기회요인**

- 국가중추행정기관의 이전과 다양한 고급인력의 유입 예상
  - 국무총리실을 비롯한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부 등 16개 기관(9부 2처 2청 1실 2위원회)의 대표적인 중앙행정기관과 20개의 소속 기관(조세심판원, 해외문화홍보원 등), 16개 국책연구기관(국토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등)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단계에 걸쳐 이전할 계획
  - 입주 예정기관들에 종사하게 될 고급인력들은 연구직, 교육직, 정부 행정직 등 전문화된 지식과 정보를 갖춘 인력에 해당하여 중부권 메갈로폴리스의 경제활동을 고도화시키고 전문화시킴으로써 특화된 권역을 형성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임
- 국토균형발전 실현의 기회
  - 기존 경부축 중심의 국토공간 불균형구조에 대한 문제점 인식으로 인하여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첨단의료복합단지 등 국가의 핵심사업들이 추진 중
  - 국가의 광대역 연결부에 중부권이 위치함으로 주변과의 연계발전에 유리한 환경
- 첨단산업벨트 등의 초광역차원 사업추진의 잠재적 여건 풍부
  - 대전, 충남, 충북 등이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IT산업의 세계적 확산 기회
  - 대전도시권은 대덕, 세종, 오송·오창으로 이어지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구축하게 될 경우 미래 국가성장 동력원의 역할이 가능
  - 대덕, 천안·아산, 오송·오창은 이미 IT, BT, NT, MT 등 기초·응용과학의 융합연구/생

산 분야에서 인프라와 경험이 축적된 지역이며, 국제과학비즈니스의 성공 가능성이 가장 높은 최적지

- 광역교통망 확충 (도로, 고속도로, 철도 등)

- 호남고속철도, 동서고속도로 건설 등

**(4) 위협요인**

- 지역 간 경제력격차의 심화와 고급인력의 정착(정주)기반 미약
  - 도시권내 지역 간 경제력 격차가 심화되고 있으며 농어촌지역의 자립적 발전기반이 취약함 : 기 발달되어 있는 충청 북부권 및 경부축의 산업 및 정주체계를 내륙으로 파급시킬 수 있는 지역개발 정책이 필요하여 고급인력의 확보를 위한 정주기반 및 도시기반시설 확대가 필요
- 중심도시와 세종시로의 생활형 역류현상으로 주변 중소도시의 공동화 우려
  - 쾌적한 녹색환경 및 어메니티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세종시 인접 도시들(대전, 청주, 공주 등)의 생활형 역도시화 현상이 우려
- 세종시 이전효과가 약화될 우려
  - 수도권과 가깝고, 광역교통이 편리하여 세종시 주요 이전기관들의 종사자들은 수도권 수준의 생활환경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정착하지 않을 우려가 있어 오히려 이전효과가 약화될 우려가 있음
  - 세종시에 이전하는 중앙부처기관들이 서울-과천-세종-대전의 청사들 간 상호 연계성을 고려하지 않고 성급하게 이전한다면, 행정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행정력이 낭비될 우려가 있음
- 수도권 규제완화로 제조업기반 약화
  - 수도권 규제 완화는 수도권 공장입지에 대한 규제 완화, 조세 및 부담금 완화, 환경규제 완화 등을 포함하고 있어 기업투자의 수도권 집중, 인구유출, 중부권의 경쟁력 상실 등 우려

## 2. 발전전략

### 1) 발전과제

- 기존의 국가중추시설을 기반으로 한 중앙행정기능과 연계한 도시권 성장동력 확충,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 등과 연계 다양한 산업클러스터 육성, 도시권의 글로벌 기능강화를 위한 중심도시 국제비즈니스 환경조성
- 중심도시와 인근지역이 지속가능한 공생발전 체계 구축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와 기존의 산업단지의 입지적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산업클러스터 조성으로 경쟁력 제고
- 국토의 중심부의 입지적 우월성과 대전 중심도시의 기능적 특성과 연계한 세종특별자치시, 오송신도시, 인근지역의 중심부와의 지속적인 네트워크 체계 구축 필요
- 동북아의 중심, 더 나아가 원 아시아(One asia)를 선도하는 대전도시권의 국제적 위상 제정립과 글로벌 환경을 조성하여 개방적 투자유치를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 마련

### 2) 대전도시권 발전전략

#### (1) 국경을 초월한 메타시티(metacity) 등장 시대의 대전도시권의 위상 정립

- 첨단 정보통신망과 국제 고속교통망을 통해 대도시의 활동영역이 국경을 초월하여 인근 국가의 도시와 연결되어 생활권, 비즈니스권이 발달하는 메타시티 대두
- 동북아 1일 생활권 시대를 맞이하여 대한민국 서울에 거주하면서 중국 상해의 직장으로 출퇴근하고 일본 오사카에서 주말 외식과 관광을 즐기는 삶이 일상화될 전망
- 국토 전체를 하나의 도시권, 1시간 생활권의 초스피드 국토형성

#### (2) 대전도시권 다이내믹 비즈니스 트라이앵글지대 구축

- 국토공간상의 대전도시권은 내륙초광역개발권 및 충청광역경제권 산업발전축과 3개의 광역도시계획상의 개발축으로 주로 각각의 중심도시와 인근지역의 연계성을 강조하고 있으나, 거대도시권 형성에는 기능적 연계가 미흡한 실정

- 대전도시권을 하나의 대도시권으로 인식하고, 도시의 역할 및 공간구조 재편을 위한 권역별 특성화와 연계 도모, 이를 위해서는 도시권내 권역 간 물리적·기능적 연계 강화 방안 모색이 요구됨
- 국가교통기간망축과 KTX 건설에 따른 국토의 시공간을 단축은 대전도시권을 전국 1일 생활권 시대로 변화시키고 있음
- 대전도시권은 광역교통의 거점기능으로서 KTX 역 기능 강화를 위한 KTX역 주변의 효율적 활용이 요구됨
- 대전도시권의 3개 KTX역을 연결하는 교통회랑(Corridor) 중심의 공간구조 재편을 추진하여, KTX 대전역, 오송역, 남공주역을 중심으로 한 One Triangle을 구축하여 광역교류의 역세권비즈니스지구 개발
- 대전도시권은 지리적으로 수도권과 영·호남지역을 연결하는 국토의 중심지이면서 육상교통의 주요 결절지이며, 기능적으로 국가중추행정기능과 국가과학기술의 혁신·발신지지로 중부권의 글로벌화에 중추적인 역할 수행
- 특히, 대덕연구개발특구를 기반으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과 세종시 건설은 분권국가·분권사회의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을 선도하고, 그동안의 권력집중과 인구집중의 악순환 고리를 극복하여 인구와 기능의 지방분산으로 국토의 균형발전을 확산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
- 따라서 대전도시권의 공간구조는 대전-세종-청주를 중심권역으로 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권과 과학기술, 국가중추기능 뿐 아니라 자연환경인 역사·호수·명산과 다양한 문화권이 형성되어 있어, 이를 연계한 녹색여가휴양벨트, 그리고 백제문화권과 기호유교문화권을 잇는 역사문화벨트를 형성시킬 필요가 있음

## 제2절 중국 다롄권

### 1. 지역개관

- 다롄은 중국 요동반도의 최남단에 위치하며, 동쪽은 황해를 끼고 있고, 서쪽은 발해를 안고 있다. 총면적은 12,574 이고, 인구는 590만 명이며, 6개 구( )와 3개의 시(市), 그리고 1개의 현(縣)을 관할하는 광역행정단위임
- 다롄은 교통체계가 매우 잘 갖추어져 해운은 세계 160여 국가 및 지역과 항로를 개설하고 있으며, 2002년 기준으로 화물처리량이 111백만톤, 컨테이너 처리량은 135만 TEU에 달하였음
- 항공은 쉰수이쯔(周水子)국제공항에 국내외 93개 노선을 운항 중이며, 동북지역의 최대 항공화물기지이기도 함. 다롄은 비록 100여년의 짧은 역사를 가진 도시이지만 중국 동북지역의 창구로서 베이징(北京)과 톈진(天津)의 문호로서 개방 초기에는 중국북방의 홍콩으로 부르다가 상하이(上海)를 동방명주(東方明珠)로 부르듯이, 다롄은 북방명주(北方明珠)로서 매우 빠르게 성장해왔음
- 최근에는 보하이만(渤海灣)을 가로질러 중국 산둥반도와 연결되는 106km 해상대교 건설을 추진 중이며, 대교가 완공되면 다롄과 칭다오(靑島) 간 거리가 1000km나 단축됨으로써 다롄과 칭다오의 산업단지가 베이징(北京)과 톈진(天津) 산업단지와 결합되는 대형 산업클러스터가 탄생하였음(중앙일보, 2010.8.18.일자).
- 환(環)보하이 경제권(京滬冀 경제권 포함)은 7개 성, 인구 3억 명이 밀집한 지역으로 국내총생산(GDP)이 중국 전체 GDP의 31%나 차지하는 거대 경제권으로서 주장(珠江)-창장(長江) 삼각주 경제권에 이어 중국 3대 경제권으로 성장발전 중임

### 2. 발전전략

- 다롄 광역권 발전전략이 논의된 배경으로는 먼저 역사 제도적으로 동북 공업지역의 노후화와 계획경제체제의 제도적 유산을 들 수 있음. 전통적으로 동북 3성은 1950년대와 60년대 중국 공업건설의 중점지역이자 신중국공업의 요람이었고, 국가발전과 안보에 역사적으로 중요한 공헌을 했으며, 동시에 계획경제의 역사적 유산이 가장 깊이 각인된 지역이기도 함

- 장기적 계획경제 체제가 가져온 체제적 모순은 다롄도 예외가 아니었으며, 다롄은 건국 이래 국가공업화와 라오닝 공업기지의 발전에 커다란 기여를 했지만, 대표적인 노후공업 도시의 하나였음. 자원 제약이 다롄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제약을 초래했으며, 시정화 정도가 낮고, 경제발전의 내재적 활력이 부족했으며, 소유제 구조가 비교적 단일하고 국유기업의 비중이 높은 편이었음
- 국유기업의 역사적 부담이 과중하고, 설비와 기술이 노후했으며, 경제효율도 낮은 편이었음. 또한 전통적 산업의 비중이 높고,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견인할 전략산업이 결핍되고, 취업과 재취업의 모순이 심각하고, 사회보장의 압력도 높았음
- 다음으로 지경학적 측면도 다롄 광역권 발전전략이 논의되는 중요한 배경이며, 다롄은 동북아지역의 중심에 위치하고, 환발해와 동북경제구의 접점에 위치하며, 교통이 발달되고, 특화된 9개의 항구가 위치하고 있음
- 특히 다롄항은 중국 북방의 중요한 대외무역항이자 동북지역 최대의 화물 환적항이며, 동북지역 70% 이상의 해운화물과 90% 이상의 컨테이너 운송을 담당하고 있음. 이러한 배경을 통해 동북지역 내에서 다롄은 사회경제적으로 다년간의 축적을 거쳐 특유의 항구입지라는 장점, 대단위 공업기지의 장점, 전방위적 대외개방의 장점, 양호한 도시환경의 장점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도 광역권 형성의 중요한 배경이 되고 있음
- 연해경제지대 광역권의 중요한 프로젝트로 손꼽을 수 있는 것은 다롄을 동북아국제물류중심으로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며, 항구자원문제에서 조정역할을 부여하려는 프로젝트임
- 즉 다롄의 물류중심 역할은 다롄이 지역의 대외개방 측면에서 선도적 역할을, 라오닝 항구들 가운데서 핵심적 역할을, 그리고 따야오완(大窯灣) 보세항이 중요한 역할을 발휘할 것을 강조하였음. 이는 정부 유인과 기업 자율성이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 분업적 협력과 상호보완의 원칙에 따라 성 전체 항구자원의 조정을 명확히 하는 것이었음
- 이를 위해 연해항구자원의 배치를 개선하고, 항구입지를 정비하고, 다롄항을 중심으로 잉커우, 단둥, 진저우, 후루다오 등의 항구를 양날개로 육성하고자 하였음. 즉 합리적 입지, 분명한 계층화, 구조의 개선, 분업과 협력체계 구축, 장점의 상호보완이 이루어지는 항구클러스터를 육성한다는 계획이 제시된 것임

### 제3절 일본 다후쿠오카권

#### 1. 지역개관

- 1972년 4월 키타큐슈시에 이어 큐슈에서 두 번째로 정령지정도시로 승격된 후쿠오카시는 키타큐슈시와 지역거점도시 자리를 두고 경쟁관계로 들어가게 되고, 이후 국가 및 정부계통의 출장기관과 기업의 큐슈지사지점 등이 키타큐슈와 구마모토시 등지로부터 이전해 옴에 따라 후쿠오카 일극집중현상이 강하게 나타났음
- 후쿠오카 일극집중을 더욱 가속화시킨 최대의 요인은 후쿠오카를 축 내지 경로로 하는 교토망의 발달에서 비롯되었음. 현재 진행중인 한일해협권 경제공동체의 대상 지역인 큐슈권(州圈)은 전체 일본경제의 10%, 전국토의 11.2%, 전인구의 10.8%(13,452천명), 전국 GDP 8.6%에 불과하지만, 네덜란드나 한국의 경제규모나 총생산액과 비슷한 수준을 지닌 경제권임
- 주요산업으로는 IC산업, 자동차산업, 철강업 등과 함께 아시아로부터의 관광객이 많아 관광산업도 중시되고 있다. 경제력은 큐슈 북부 3현(福岡縣, 長崎縣, 佐賀縣), 특히 후쿠오카현에 집중되어 있음
- 특히 후쿠오카현과 함께 후쿠오카 광역권을 구성하는 큐슈의 중추거점도시인 후쿠오카시는 1960년대 후반 이후, 지역경제 중심도시로서 성장해왔고, 90년대 들어 아시아의 거점도시로 성장 중임
- 후쿠오카시와 그 주변인 후쿠오카현을 포함하면, 면적 337 , 시내인구 130만 명(큐슈 전 인구의 약 1할), 도시권인구 220만 명이며, 100km 교류권내에 800만 명의 인구가 상주한다. 후쿠오카 광역권은 일본 4대 도시세력권(도쿄, 오사카, 나고야, 후쿠오카) 중 하나임
- 정부기관, 외국공관, 금융기관 및 대기업의 지점, 대규모 상업시설, 문화시설 등이 집중되어 있어 큐슈권의 수도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세계화 전략으로서 아시아지향을 표방하면서 아시아와의 네트워크를 적극 강화하고 있음

#### 2. 발전전략

- 1990년대 이후 추진되어 온 평성(平成) 시정촌 합병 이후의 과제로서 기초지자체 연계 과제가 중요시되고 있으나, 기존의 현을 폐지하는 도주제 실행은 당장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임
- 현재 시정촌합병이 일단 마무리된 상태에서 자치체 간 연계협력의 방식과 추진체계, 사업대상 등에 논의가 제시되고 있으며(加茂利男 등 편저, 2010), 과거 시정촌 합병과정에서와 같이 중앙정부의 보조금 지급을 통한 유인책 등이 정책적으로 마련될 경우 가속화될 가능성도 큼
- 후쿠오카시는 큐슈의 중점 핵심도시로서 후쿠오카시만의 발전보다는 전체 큐슈의 발전을 염두에 두고 발전 계획을 수립, 집행하고자 하고 있음
- 후쿠오카시는 제조업보다 서비스업이나 IT 등 소프트웨어산업이 주종이며, 키타큐슈시는 자동차, 철강 등 제조업이 주종이므로 상호 보완성을 지닌다고 볼 수 있음. 이는 향후 우리나라 동남권 연계사업 모색 및 초국경 광역경제권 사업 방향을 설계할 때 중요한 시사점을 줌
- 큐슈나 동남권 모두 중앙정부에 대해 세관장벽 철폐 및 취업비자 발급 등 애로 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해결책을 요구할 필요가 있음
- 일본에서는 국토계획을 <국토형성계획>이라 부르며 2005년 제정된 <국토형성계획법>에 근거한 법정계획임. 중앙정부가 직접 수립하는 <전국계획(全國計劃)>과 중앙정부가 지역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립하는 <광역지방계획>으로 이원화되어 있음
- 전국계획은 2008년 7월 4일 확장·공표되었으며, 광역지방계획은 앞서 지정한 바대로, 2009년 8월말에 각 블록별로 수립·확정되었음. 국토형성계획이 도입되기 이전에 일본 국토계획은 전국계획으로 일원화되어 있었음(정명운, 2007).
- 이와 동시에 일본의 산업클러스터 정책은 2001년부터 경제산업성 주도로 산업클러스터 계획이 추진되었고, 2002년부터는 문부과학성이 연구개발과 대학의 역할을 보다 강조하는 지식클러스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2000년대 중반부터는 중앙정부의 다른 부처에서도 산업클러스터와 연관된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음. 농림성은 음식료품 제조업과 농수산업을 연계하는 식료산업클러스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토교통성은 산업클러스터 정책 지원을 위한 공간적 접근으로 산업 집적극 형성을 추진 중임
- 지방정부 역시 독자적으로 지역클러스터 육성을 추진하고 있는데, 문부과학성이 지식클러스터 사업과 더불어 자체적으로 전통산업클러스터 구축과 콘텐츠 산업클러스터 구축을 추진하고 있음
- 지역 내 산학연간 교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지자체, 지역 경제계, 대학이 협력하고 있음. 산업클러스터 사업의 목적은 궁극적 지역 자립적 발전을 지원하는 데 있으며, 이는 현재 논의 중인 도주제 제도 도입의 중요한 산업적, 경제적 토대와 관련된다는 점에서 향후 더욱 중요한 의미를 지님
- 경제산업성 산하 큐슈경제산업국이 주도하는 산업클러스터 제3기(2011년~2020년) 계획은 산업클러스터의 자율적 발전기로 볼 수 있으며, 클러스터 네트워크의 형성, 구체적인 사업의 계속적 추진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재정적인 면에서는 산업클러스터 활동의 자립화 및 자율화를 도모하면서 ‘큐슈지역 환경·리사이클산업’, ‘교류플라자’ (K-RIF)(환경분야 약 250개 기업, 18개 대학), ‘큐슈 실리콘 클러스터계획’ (반도체 분야 약 410개 기업, 88개 대학) 등을 실행 중임(큐슈경제산업국, 2009).
- 한편, 문부과학성의 지식클러스터 조성사업으로 실행된 제3차 과학기술기본계획(2006~2010)이 종결되었는데 이는 지식클러스터 정책의 발전기(제2기) 혹은 “지역혁신 체계의 주축과 활력있는 지역의 창출” 단계로서, 지역클러스터의 형성, 지역 내 과학기술정책의 개발을 내용으로 함
- 이미 2002년 시도된 큐슈광역지식클러스터 사업은 1차적으로 기타큐슈 학술연구도시지역에 기타큐슈 휴먼 테크놀로지 클러스터(정보통신, 환경)를, 후쿠오카지역에는 후쿠오카 시스템 LSI 설계개발 클러스터(정보통신, 환경)를 조성하였고, 2차적으로 후쿠오카-기타큐슈이이즈카지역에 후쿠오카 첨단시스템 LSI개발 클러스터(정보통신)를 조성하여 핵심연구기관으로 큐슈대, 후쿠오카대, 와세다대 등을 지정한 바 있음

## 제 4 장

### 한·중·일 아시아공동체 형성 방안

#### 제1절 기본방향

#### 제2절 한·중·일 아시아공동체 형성방안



## 제4장 한·중·일 아시아공동체 형성방안

### 제1절 기본방향

- 최근 국제정세 변화 속에서 아시아지역의 국가 및 지역적 인적·물적·문화적 교류가 급속하게 증가하면서 한·중·일 지역통합 및 공동체 형성의 필요성은 높아지고 있음
- 한·중·일 아시아공동체가 진정으로 형성되기 위해서는 어느 한 국가가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단순한 이해관계의 일치보다는 공동이익 실현시키기 위한 규범에 근거한 다자주의적 접근이 필요함
- 아울러 일상적 삶의 영역에서 나타난 다양한 수준의 주체자들에 의한 초국가적 교류와 네트워크의 형성과 지역 및 도시간의 경제·문화적 교류 및 연대를 강화하는 상향적 접근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한·중·일 아시아공동체 형성의 실질적 엔진은 거점권역을 중심으로 한 경제협력에 있으며, 이를 실현시킬 수 있는 공동이익 및 비전을 공유할 수 있는 정치적인 지도력과 리더십이 필요함
- 한·중·일 아시아공동체 공동체 형성을 위해서는 이데올로기나 지식인의 담론에 의해서 추동되거나 국가중심의 하향적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것보다는, 지방정부 차원의 기형성된 정치, 경제, 사회·문화 등의 네트워크 기능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음
  - 이시아의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한 한국 대전발전연구원과 중국 대련시 인민정부 발전연구중심 간의 ‘한·중 상호 학술여합작협정서’ 의거 지속적으로 상호 학술 교류 확대 추진
  - 학술 문화의 발전을 위해서 연구·정보교류를 촉진하고 양 연구기관 상호간의 이익과 경쟁력 있는 발전에 공헌하기 위해 한국 대전발전연구원과 일본 북강아시아도시연구소 간의 ‘한·일 상호 연구교류협정서’ 의거 다양한 교류 확대 추진

## 제2절 한·중·일 아시아공동체 형성방안

### 1. 공동체 형성과제<sup>2)</sup>

- 한·중·일 3국은 현재 추진되고 있는 '환황해 경제 협력'과 '환동해 경제 협력' 등을 활용하여 공동체 건설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며, 문화역사전통에 관한 공동 연구와 국가 간 상호 이해를 증대시켜 나갈 경우, 21세기는 유럽 공동체 못지않은 동북아 공동체 건설은 물론이고 이를 구체화시키기 위한 한·중·일아시아 공동체 실현이 가능한 계기가 될 것임
- 우선, 역사문제·영토문제·지역 현안문제 등을 해소할 수 있는 한·중·일 아시아 지역 차원의 공통의 분모가 부재하다는 점이며, 국가 간 이익을 둘러싼 분쟁, 전쟁에 의한 가해국과 피해국의 존재 등을 용해할 공통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문명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 한·중·일 아시아 공동체 구성과 미국의 관계문제로, 즉 여전히 존재하는 동맹구조와 지역공동체 구상을 어떻게 연계할 것인가의 문제이며, 이 문제는 향후 지역공동체 구성과 관련 상당한 논란의 진원지가 될 가능성이 높음
- 이데올로기적 대립 구도로 인해 한·중·일 아시아 공동체로 포괄되지 못하는 국가들을 어떻게 유인할 것인가의 문제이며, 북한과 타이완의 문제는 공동체 구성과정에서 필수적으로 해결해야 할 중요한 대상이며, 특히 한국의 입장에서 북한문제는 공동체 구성에서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음
- 이러한 복잡한 상황 속에서 한국은 북한 문제와 동시에 한·중·일 아시아 공동체 형성과정에서 새로운 역할을 모색해야 할 것이며, 한·중·일 아시아 공동체 구상의 실행방향은 지역의 안정과 경제발전을 위한 것이며, 이 과정은 동시에 한반도의 평화체제 실현과 통일을 가능케 하는 환경을 만들어낼 수 있는 선순환적인 것이어야 할 것임
- 이를 위해서 한국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제 협력이 중층 복합적 구조를 갖고 있음을 감안, 기존의 다양한 협력체와 협의체를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이를 체계화할 수 있는 네트워크 구축을 통하여 지역 협력의 중심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2) 김종욱, 2011, “한반도 평화공영체제’ 구상과 ‘동아시아 공동체 건설”, 통일정책연구 제20권 1호.

### 2. 공동체 형성방안<sup>3)</sup>

#### 1) 사회·문화적으로 연대감 확립

- 경제통합의 초기성고가 가시화되고 공동이익을 공유하는 경험이 축적되면서 각국 내에서 지역통합 자체에 대한 긍정적인 국가전략이 구축되는 시기에 통합의 대상으로 부상될 수 있음
  - 경제분야의 통합이 실용적이고 기능적인 측면에서 지역통합을 통해 상호협력의 필요성을 확인하는 데 중점을 둔다면, 사회·문화 분야의 통합은 지역통합의 추가적인 추진력이 되는 국가 간의 연대감(solidarity)의 형성과 동아시아에 대한 정체성(identity)을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함
  - 한·중·일 아시아 지역의 다양한 민족들이 자신을 ‘아시아인’ 으로서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이를 기초로 다양한 협력 및 통합을 보다 활발하게 전개할 수 있는 국가연대를 확립하는 기제를 제공하는 역할을 바로 사회·문화 분야의 통합이 담당하였음
- 최근 한·중·일을 비롯한 동아시아의 많은 나라에서 광범위하게 수용되고 있는 ‘한류’ 등 청년문화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정체성을 꾸준히 구축해 나가는 방법, 한·중·일 3국의 주요 도시 간 보다 긴밀한 협력적 연계를 통한 문화 및 정책 교류를 확대하는 방법 등을 통한 이 문화 포용능력의 진작 등 실로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을 것임

#### 2) 도시연합을 기반으로 한 공동체 형성<sup>4)</sup>

- 한·중·일 아시아공동체 형성을 위해서는 자국 내의 지역 및 도시간의 상호협력을 강화하여 진정한 협력관계로 발전될 수 있도록 ‘민족성’보다는 ‘국제성’을 우선하는 열린 마음이 전제되어야 할 것임
- 이를 위해서는 한·중·일 도시권 중에서 현재 교류관계를 고려하여 학술·경제교류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 발전시키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며, 특히 각 도시권의 연구기관들 간

3) 박성훈, 2010, “동아시아 통합방향과 로드맵”, 동아시아 통합전략 : 성장-안정-연대의 공동체 구축, 한국개발연구원

4) 오수열, 2005, “동아시아 협력관계 강화를 위한 지역/도시 연합”, 동아시아시대의 도래와 지역 시민사회의 과제」에서 재정리

의 ‘인적교류 및 공동연구’ 기능을 강화하여 한·중·일 아시아공동체 형성을 위한 기반을 구축 할 필요가 있음

- 한·중·일 공동체 형성 차원에서 지방정부들 간의 국제적 협력 확대는 도시 및 지역의 발전을 위한 경제교류, 사회문화교류 등의 측면에서 상호에게 유익함을 안겨줄 수 있음
- 도시 및 지역들과 자매결연 등 상호협력관계가 있는 곳이라는 사실은 방문객으로 하여금 상당한 정도의 친근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여 여행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며, 이는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촉진시키게 되므로 지역발전에 기여하게 됨
- 오늘날 국가 간의 교역은 단지 중앙정부만의 임무가 아니며, 지방정부차원에서도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으므로, 이는 국내적으로도 거의 모든 지방정부가 자기 지역의 생산품 판매 확대를 위하여 전국적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양상과 비슷함
  - 국가적으로도 세계의 주요 지역이나 지역경제협의체들은 세계무역의 급속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들끼리 많은 무역행위를 하고 있으며, 이러한 역내무역 의존도는 갈수록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바, 이제 무역에도 친밀도 등 상호간의 관계가 크게 영향을 미치는 시대에 들어선 것임
- 글로벌 시대 지방정부의 외국 지방정부와의 협력관계 확대나 연합은 국가 내부적으로는 지방 분권화를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기도 하는데, 과거에는 국가의 대외적 활동은 중앙정부의 몫이라고만 알았던 데에서 벗어나 앞으로는 지방정부의 활동영역의 확대로 공동체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임

### 3) 한·중·일 아시아공동체 지식네트워크 구축

- 한·중·일 아시아에서는 다양한 분야에서 공무원, 기업인, 연구원 및 학자, 시민운동가 등을 엮는 지식네트워크가 형성되고 있는데,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한·중·일 아시아 공동체로 형성될 수 있도록 지식네트워크 구축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한·중·일 아시아공동체 지식네트워크 구축은 단순한 지식네트워크라기보다는 공동의 가치를 실현하는 종합적 네트워크로 경제협력, 사회문화교류 등이 가능한 지식공동체로 발전될 수 있도록 장기적인 관점에서 세계적으로 한·중·일 아시아의 위상을 제고 시킬 필요가 있음

## 제 5 장

### 결 론

제1절 연구요약

제2절 정책제언

## 제5장 결 론

### 제1절 연구요약

- 21세기의 동아시아 질서가 미중 양강구도를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일 양국은 초강대국 미국과 신흥 초대국 중국의 사이에 낀 중간적 존재가 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그런 의미에서 한국은 말할 나위도 없지만 일본의 경우도 더 이상 아시아 지역의 주도적 지위를 추구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구도에 놓이게 되었음
- 이러한 상황에서 한·중·일 아시아 지역간 경제교류, 물적 교류와 같은 하드웨어 수준의 교류를 넘어서 지역공동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신뢰, 상호가치 등에 기초해 지역공동체의 공동이익을 위한 비전공유가 요구됨
-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건강한 한·중·일 아시아공동체 형성을 위한 발전도대를 마련하기 위한 기초연구를 수행하였음
- 먼저, 한국의 동아시아 경제공동체의 구상은 유럽통합을 모델로 삼아 단계별로 점진적 접근을 추구하고 있으며, 동아시아의 양대 강국인 중국과 일본 사이에 위치하여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이들 간 연결고리로서 중간자 역할을 모색하는 동시에, 중국과 일본에 대한 정치·군사·경제·심리적으로 위협인식을 갖고 있는 동남아 아세안 국가들과의 전략적 제휴를 강화하고 있음
- 중국은 주도권을 갖고 있는 아세안과의 경제통합에 일본과 한국을 끌어들이므로써 동아시아 경제통합을 완성하려는 구상을 갖고 있으며,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구의 패권주의에 대응할 새로운 국제 정치경제 신질서의 수립을 지향하며 향후 다극화 과정에서 하나의 극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기반으로써 동아시아 공동체를 구상하고 있음
- 일본은 동아시아를 둘러싼 인식은 크게 동아시아 공동이익, 미국의 영향력 유지, 동아시아의 경쟁과 갈등, 그리고 중국의 부상을 고려하는 아시아 중시, 기능적다국적 협조 중시, 미일동맹 중시, 제한된 경제협력을 중시하고 있음

- 한·중·일 아시아공동체 공동체 형성을 위해서는 이데올로기나 지식인의 담론에 의해서 추동되거나 국가중심의 하향적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것보다는, 지방정부 차원의 기형성된 정치, 경제, 사회·문화 등의 네트워크 기능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음
- 한·중·일 아시아 지역의 다양한 민족들이 자신을 '아시아인' 으로서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이를 기초로 다양한 협력 및 통합을 보다 활발하게 전개할 수 있는 국가연대를 확립하는 기제를 제공하는 역할을 바로 사회·문화 분야의 통합이 담당하였음
- 한·중·일 도시권 중에서 현재 교류관계를 고려하여 학술·경제교류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 발전시키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며, 특히 각 도시권의 연구기관들 간의 '인적교류 및 공동연구' 기능을 강화하여 한·중·일 아시아공동체 형성을 위한 기반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서는 한·중·일 아시아에서는 다양한 분야에서 공무원, 기업인, 연구원 및 학자, 시민운동가 등을 엮는 지식네트워크가 형성되고 있는데,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한·중·일 아시아공동체로 형성될 수 있도록 지식네트워크 구축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음

## 제2절 정책제언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아시아가 세계 경제의 원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켰으며, 세계 경제의 성장엔진으로서 아시아의 가치를 확실하게 각인시켰음
- 한·중·일 3국 유구한 역사를 통해 세계 어느 지역과 비교해도 뒤떨어지지 않는 긴밀한 문화적 동질성을 보유하고 있으나, 지역협력을 위한 상호 간의 노력은 상당히 미흡한 상태로 아시아의 공동발전을 위해서 공동체 형성의 접근이 요구되고 있음
- 이러한 아시아적 가치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한·중·일 아시아공동체 형성을 위해서는 공동체 형성 이념이나 비전 및 철학을 공유하기 위한 경제, 문화, 정치, 인권, 환경, 복지 등의 분야에서 다방면적인 접근이 전제되어야 함
- 유럽통합 과정에서 인류의 보편적 가치에 기초한 선명한 통합 이념과 비전 및 철학을 공유했으며, 평화를 추구하고 민주주의, 인권, 법치 존중의 이념 가치를 공유했을 뿐 아니라, 개별 국가의 이익과 합치되는 협력과 과정을 전개하였음
- 최근 한·중·일은 그 어느 때 보다도 국제적 경제질서 변화, 영토분쟁 등 지역주의 구상을 둘러싼 갈등구조가 나타나고 있으나, 신시대 한·중·일 관계의 새로운 미래 비전을 형성시키기 위해서는 삼국의 골 깊은 역사 마찰을 창의적인 노력으로 극복하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전 영역에 걸친 전면적인 협력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한·중·일 아시아공동체 형성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최근 더욱 강해지고 있는 민족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관용과 화해의 분위기를 성숙시킬 수 있는 미래 지향적인 리더십이 요구되며, 3국의 공동발전을 위한 비전공유가 중요함
- 따라서 한·중·일 아시아공동체 형성을 위해서는 삼국 간 정부 및 시민사회의 교류 기반을 국익도 중요하지만 인권, 평화, 환경, 복지, 인간 안전망 등과 같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노력이 요구되며, 이는 급속하게 재편되고 있는 국제질서 속에서 한·중·일 아시아공동체 형성은 지속적인 공동발전의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됨
- 또한, 한·중·일 아시아공동체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상품 및 재화, 통화와 정보가 자유롭게 이동하는 체제의 확립이 필요하다는 공동인식이 선행되어야 함

## 참고문헌

- 강만길 외, 2004, 근대 동북아 역사 인식 비교, 선인.
- 권용역 외, 2004, 한중일 3국 가족의 의사소통 구조 비교, 이학사.
- 김기봉, 2006, 역사를 통한 동아시아 공동체 만들기, 푸른역사.
- 김성국, 2005, “동아시아공동체 형성의 의의와 전망” 동아시아시대의 도래와 지역 시민사회의 과제, 중앙일보 시민사회연구소·(사)목요학술회.
- 김영운, 2011, “동북아공동체형성 : 이론·전망·과제”, 동북아공동체연구회 세미나.
- 김종욱, 2011, “‘한반도 평화공영체제’ 구상과 ‘동아시아 공동체 건설’”, 통일정책연구 제 20권 1호.
- 김학수, 2010, “유럽공동체에 비추어 본 아시아공동체”, 2010 신아시아 산학관협력 포럼 자료집.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5, 동북아 경제공동체 실현을 위한 단계적 추진전략.
- 대외경제정책연구원·산업연구원, 2011, 남북 경제공동체 추진구상, 정책연구보고서.
- 박성훈, 2010, “동아시아 통합방향과 로드맵”, 동아시아 통합전략 : 성장-안정-연대의공동체 구축, 한국개발연구원.
- 백원담, 2005, 동아시아의 문화 선택, 한류, 팬타그램.
- 세종연구소, 2011, 일본의 동아시아공동체 구상 : 전개, 쟁점, 그리고 한국의 대응.
- 신윤환, 2009, “동남아의 지역주의와 ‘동아시아 공동체’ : 그 역사에 대한 재해석”, 동아연구, 제56호, 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
- 오수열, 2005, “동아시아 협력관계 강화를 위한 지역/도시 연합, 동아시아시대의 도래와 지역 시민사회의 과제.
- 이승환, 2000, “동아시아 문명공동체는 가능한가?”, 아태평화포럼, 제44호, 아태평화재단.
- 이욱연, 2007, “동아시아 공동체 문화담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동아연구, 제52호, 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
- 이창재 외, 2005, 동북아 경제공동체 실현을 위한 단계적 실현 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이한우, 2007, “동아시아공동체에 대한 일본과 중국의 시각과 이해 : 민간의 논의를 중심으로”, 동남아시아연구 제17권 2호.
- 장대환, 2011, 원아시아 모멘텀, 매일경제신문사.
- 정형곤, 2009, 한반도 경제공동체, 그 비전과 전략,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 통일부, 2011, 남북 경제공동체 추진 구상

한중일 아시아공동체 형성을 위한 기초연구

포스코청암재단, 2010, 동북아 3국의 사회자본과 지역공동체 형성

한국개발연구원, 2010, 동아시아 통합전략 : 성장-안정-연대의 공동체 구축.

한상일 · 이숙중 공편, 2011, 일본과 동아시아-지역협력과 공동체 구상, EAI.

한상희, 2002, “동아시아 공동체에 대한 한중일의 인식과 전략” , 안암법학, 제15호, 안암  
법학회.

부록 I : 한·중 상호 학술여합작협정서

- 한국 대전발전연구원과 중국 대련시인민정부발전연구중심이 아시아의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에 관한 상호 학술교류를 위한 양해각서 체결

부 록

**交流与合作协定书**

본 양해각서는 한국 대전발전연구원과 중국 대련시인민정부발전연구중심이 아시아의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에 관한 상호 학술 교류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第一条 (目的)** 본 협약은 대전발전연구원과 대련시인민정부발전연구중심간 상호학술교류와 지속가능한 아시아 도시의 발전을 위한 공동연구를 목적으로 한다.

**第二条 (相互合作)** 대전발전연구원과 대련시 인민정부 발전연구중심은 상호 평등의 원칙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대하여 협력한다.

1. 상호방문을 교류와 합작의 주요형식으로 하고, 필요시 상호협상에 의하여 연구협력을 한다.
2. 쌍방은 매년 1차레연구인원을 파견하여 방문과 학술교류를 하며, 인원은 5인이내로 한다.
3. 교류방문의 관련비용은 항공비용은 방문자가 부담하고 주숙은 초청자가 부담한다.
4. 이미 공개된 자료는 서로 제공하며 쌍방간 학술활동을 위한 편의를 제공
5. 기타 협력시 관련된 사항은 쌍방간 평등호리의 원칙하에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결정한다.

**第三条 (学术交流协议体制的构成及运行)**

1. 제2조에 규정한 협력사업을 위하여 상호 협의 하에 학술교류협의체를 둔다.
2. 학술교류협의체는 대전발전연구원 원장 및 기획조정실장과 중국 대련시인민정부발전연구중심의 주임 및 부주임으로 구성된다.
3. 학술교류협의체는 매년 학술교류시 개최되는 것으로 하고, 쌍방 교류를 위한 중요 사항을 논의하고 결정한다.

**第四条 (相互合作及信任维持)** 본 협정서의 내용을 이행함에 있어 취득한 사실에 대하여 쌍방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공개 또는 타 목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하며 상호 비밀유지에 신의 성실을 다한다.

**第五条 (协定书的效力)** 본 협정의 유효기간은 2년이며, 협정을 체결한 날로부터 발효한다. 상호 협의에 따라 개정 또는 폐지할 수 있으며, 협정서 유효기간 종료에 대한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협정서는 자동 갱신하는 것으로 본다.

본 협정서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한국어와 중국어 협정서 1부를 작성하여 기관의 대표자가 서명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12年 8月 21日

韓國大田發展研究院長  
李 昶基
大連市人民政府發展研究中心 主任  
李才



交流与合作协定书

本协定书是韩国大田发展研究院和中国大连市人民政府发展研究中心之间就城市间的可持续发展进行相互间的学术交流而缔结的，协议内容如下：

第一条（目的）本协定书签订的目的是大田发展研究院和大连市人民政府发展研究中心之间就相互间的学术交流和亚洲城市的可持续发展进行共同研究。

第二条（相互合作）大田发展研究院和大连市人民政府发展研究中心在相互平等的基础上进行如下合作。

- 1、双方将相互访问作为交流与合作的主要形式，必要时进行相互协商的研究合作。
- 2、双方每年一次互派研究人员进行访问和学术交流，每次访问人员在5人以内。
- 3、交流访问的相关费用：由主访一方负担往返机票费和住宿费，主邀一方负担其他接待费用。
- 4、双方之间相互提供已公开的资料，为双方间的学术活动提供便利。
- 5、其他合作时所涉及的事项，由双方本着平等互利的原则，通过充分协商来决定。

第三条（学术交流协议体制的构成及运行）

- 1、为第二条所述的合作产业进行相互协商而组成学术交流协议体制。
- 2、本学术交流协议体制由大田发展研究院院长及其策划调整室长、中国大连市人民政府发展研究中心主任及其副主任组成。
- 3、本学术交流协议体制在每年进行学术交流时为双方之间的交流对重要事项进行商议决定。

第四条（相互合作及信任维持）在履行本协定书的过程中双方所获得的资料及信息内容，不经双方同意不得向第三人提供或公开，且不得做其他用途，相互之间保持信任 and 进行保密。

第五条（协定书的效力）本协定有效周期为2年，自协定书签订之日起生效。有效期内可由双方进行协商而进行修改或废除，在协定书的有效期限结束后，若无另外约定可视为自动延长一个有效周期。

第六条为诚实履行本协定书的内容，分别制作韩语和汉语两种版本，在双方负责人签字盖章后各自保管1份。

2012年 8月 21日

大连市人民政府发展研究中心 主任

李才



韓國大田發展研究院院長

李 昶基



부록 II : 한일 상호 연구교류협정서

- 재단법인 대전발전연구원과 재단법인 북강아시아도시연구소는 상호간의 학술과 문화 발전을 위한 학술협정 체결

研究交流協定書

財團法人大田發展研究院과 財團法人福岡 ASIA 都市研究所는 兩 研究機關의 相互信賴를 基盤으로 하여, 學術·文化의 發展을 위해서, 研究·情報交流를 促進하고, 兩 研究機關 相互間의 利益과 競爭力 있는 發展에 貢獻할 수 있도록 本 交流協定을 締結한다.

(交流의 內容)

1. 兩 研究機關은 相互의 研究의 必要性에 根據하여, 다음과 같은 事業을 施行한다.
  - (1) 研究테마가 同一하거나, 또는 共同으로 研究하는 것이 必要로 되는 경우, 共同研究 및 學術行事의 共同開催를 實行할 수 있다.
  - (2) 學術資料, 出版物 및 知識情報의 交流
  - (3) 其他, 相互協력이 必要한 交流

(法 및 協定의 遵守)

2. 法的 效用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한다.
  - (1) 本 協定은 모두 大韓民國과 日本國의 法律에 의거 管理된다.
  - (2) 兩 研究機關은 本 協定 施行期間 中, 各國의 法律에 따르기로 同意한다.
  - (3) 本 協定에 根據한 各 事業의 實施에 대해서는, 그때마다 兩 研究機關이 充分한 協議·決定을 거쳐 遂行한다.
  - (4) 本 協定을 實施함에 있어서 兩 研究機關의 自主性을 侵害하지 않도록 하며, 兩 研究機關 모두 어떠한 義務도 가지지 않는다.

(改正)

3. 本 協定은 相互 同意를 거쳐 改正할 수 있다.

(有效期間 等)

4. 本 協定은 締結日로부터 5年間 有效한 것으로 하며, 兩者의 一方으로부터 期限의 6個月前에 協定廢止의 申請이 없는 한, 이후 同期間씩 更新되는 것으로 한다.
5. 本 協定書는 雙方이 各 1部씩 保管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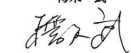
2011年 2月 7日

大田發展研究院院長  
李 昶基



2011年 2月 7日

福岡 ASIA 都市研究所 理事長  
樺木 武



### 研究交流協定書

財団法人福岡アジア都市研究所と財団法人大田発展研究院は、両研究機関の相互信頼を基盤として、学術・文化の発展のため、研究・情報交流等を促進し、両研究機関相互の利益と競争力のある発展に貢献できるようにここに研究交流協定を締結する。

(交流の内容)

1. 研究機関は、相互の研究的必要性に基づき、次に掲げる事業を行う。
  - (1) 研究テーマが同一の場合、又は共同して研究することが望ましい場合、共同研究及び学術行事の共同開催を実施することができる。
  - (2) 学術資料、出版物及び知識情報等の交流
  - (3) その他、相互協力が必要な交流

(法及び協定の遵守)

2. 法的な効用は、次のとおりとする。
  - (1) 本協定は、すべて日本国と大韓民国の法律によって管理される。
  - (2) 両研究機関は、本協定期間中、それぞれの国の法律に従うことに同意する。
  - (3) 本協定に基づく各々の事業の実施は、その都度、両研究機関で十分な協議・取り決めを経て、遂行するものとする。
  - (4) 本協定を実施するにあたっては、両研究機関の自主性を尊重するものとし、両研究機関とも、いかなる義務も持たない。

(改正)

3. 本協定は、相互の同意により改正することができる。

(有効期間等)

4. 本協定は、締結の日から5年間有効とし、両者の一方の側から期限の6カ月前に協定廃止の申し出がない限り、以降毎年更新されるものとする。

5. 本協定書は、日本語及び韓国語で作成し、双方が一部ずつ保管する。

2011年 2月 7日

2011年 2月 7日

財団法人福岡アジア都市研究所理事長

橋本 武



財団法人大田発展研究院院長

李 昶基



정책연구보고서 2013-00

## 한중일 아시아공동체 형성을 위한 기초연구

발행인 이창기

발행일 2013년 6월

발행처 대전발전연구원

301-763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85(선화동)

전화 : (042)530-3500 팩스 : (042)530-3528

홈페이지 : <http://www.djdi.re.kr>

인쇄 :

ISBN :

본 내용은 연구자의 견해로서 대전광역시 및 대전발전연구원의 공식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